

냉해 현장 조사해 보니…4배 늘어난 8237ha

전남 1만1639농가 피해…180억 국비 지원 요청
농민들 “3년째 냉해 반복…근본대책 세워 달라”

지난 4월 영하권 추위로 인한 전남지역 이상저온(냉해) 피해 면적이 당초 1915ha<광주일보 2020년 04월 22일자 5면>보다 무려 6322ha 늘어난 8237ha로 조사됐다. 피해 농가만 1만1639 농가로 파악됐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부터 3일간 나주·영암 등 일부 지역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가면서 농작물 냉해 피해가 잇따랐다.

냉해 초기 전남도와 22개 시·군 조사 결과 피해 면적은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에 걸쳐 1519ha로 파악됐다.

품목별로는 배 1319ha, 키위 42ha, 녹차 42ha, 단감 12ha 등이었고, 지역별로는 나주시 971ha, 영암군 354ha, 보성군 94ha, 곡성군 58ha, 구례군 35ha, 장성군 3ha 등이었다.

그런데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1일까지 25일간 공무원·이장 등 합동 현장 조사 결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전남에서만 모두 8237ha에 걸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된 것이다.

작물별 피해면적은 배 2394ha, 매실 1330ha, 밀 903ha, 단감 681ha, 고구마 390ha, 복숭아 316ha으로 대폭 늘었다.

지역별로는 나주 1959ha, 해남 1226ha, 순천 876ha, 장성 565ha, 영암 530ha 순이다.

배의 경우 꽃이 가장 많이 피는 시기(개화 최성기)에 영하권 강추위가 들이닥쳐 나주와 영암 등지에서 큰 피해를 냈다. 개화 최성기 이후 수정 작업을 해야 하는데,

씨방이 얼어붙어 수정되지 않고 수정이 되더라도 기형과가 많다는 게 농가 들 설명이다.

그나마 지난해까지 80%이던 농가 재해보험보상률이 올해부터 50%로 내려앉아 농가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나주에서 배농사를 짓는 임문재(64)씨

는 이날 광주일보 통화에서 “냉해 피해가 최근 3년째 이어지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세워주고, 피해 실정에 맞는 보험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농가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에 농약대 161억원, 생계지원비 17억원 등 모두 180억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냉해 피해 복구비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중 확정·지원될 것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했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번기 일손부족 등 어려운 여건에 저온피해까지 겹쳐 농가가 큰 시름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되풀이되는 과수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방상팬 설치 확대 등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봄철 냉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 면적은 지난 2018년에는 1만9800ha, 지난 2019년에는 3904ha였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앞줄 왼쪽 세번째)가 2일 오후 영암군 금정면 아천리 대봉감 이상 저온 피해현장을 방문, 전동평 영암군수(앞줄 왼쪽 두번째)로부터 피해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전남도 제공>

10년간 2조 들여 바닷물에 깎여나간 해변 복구 나선다

정부 3차 계획 확정

전국 연안 283곳 대상

정부는 2029년까지 10년간 2조3000억원을 투입해 전국의 연안 지역 283곳에 대해 침식으로 훼손된 모래사장 등을 복구하는 등 정비사업을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3차 계획은 연안 재해 대응 능력 향상과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을 큰 목표로 잡고 연안 보전사업 249건과 쾌적한 연안 환경을 조성하는 친수 연안사

업 34건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실행된다.

연안 보전사업의 경우 침식에 의해 해변이 깎여나간 피해구역뿐 아니라 인접한 해안선에 영향을 미치는 구역 전체로 사업 범위를 확장한다.

중전에 훼손된 구역에만 사업을 하다 보니 장기적으로 추가 침식이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50곳의 연안 지역 중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곳의 비율은 5년 전보다 18% 포인트 증가한 153곳이다.

또 연안 침식을 막기 위해 설치하던 수

중 방파제 등 대형 구조물보다 모래공급이나 모래 언덕 만들기 같은 친환경적 방법을 확대하기로 했다.

모래 대신 자갈로 해변을 복원하거나 침식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토지를 매수해 정부가 완충 구역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새로 시도할 예정이다.

친수 연안사업에서는 매립이나 과도한 콘크리트 시설물 설치보다 나무를 심어 공원을 가꾸거나, 코코넛 섬유로 만든 야자 매트로 산책로를 만드는 등 환경친화적 요소를 늘리기로 했다.

해수부는 또 연안정비 자료를 모두 디지털화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연안정비 통합 플랫폼도 개발할 예정이

다.

김성범 해수부 항만국장은 “앞으로 10년 동안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연안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연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한다. 해수부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2차 계획에 따라 192건의 연안보전사업과 49건의 친수연안사업을 추진했다.

해수부는 당초 2차 연안정비 계획 예산을 2조원 상당으로 잡기로 계획했으나 실제 지방비 집행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면서 9173억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연안 보전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7:3 비율로, 친수사업은 5:5의 비율로 투입된다.

/연합뉴스

광주시민, 재난지원금 66% 식비·생활용품 구매

슈퍼·편의점·음식점 사용 많아

광주 시민들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66%이상을 슈퍼와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식비와 생활용품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10만5353가구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가 아닌 선불형 지역 화폐인 광주 상생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 상생 카드 지급 액수는 710억8300만원이다. 이 가운데 29.8%인 211억82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동네 마트를 포함한 슈퍼·편의점으로, 사용액은 전체의 38.4%인 81억3400만원이었다. 음식점 사용액도 59억1000만원

(27.9%)으로 많았다. 재난지원금의 66.3%가 식비 또는 생활용품 구매에 쓰인 셈이다. 이어 ▲병원·약국 21억8200만원(10.3%) ▲의류·잡화 16억5200만원(7.8%) ▲주유 정비 13억7700만원(6.5%) ▲뷰티 생활 10억3800만원(4.9%) ▲학원 교육 5억800만원(2.4%) ▲레포츠·문화·취미 3억8100만원(1.8%) 순이었다.

광주에서는 1일 현재 지원 대상 61만 5188가구 가운데 58만8623가구(95.7%)가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3859억원, 가구당 평균 65만5000원이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사용처는 아직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신성장 동력 발굴 ‘연구바이오산업’ 신설

민선 7기 전남도가 미래 신산업 개척을 위해 ‘연구바이오산업’을 신설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국제협력관 소관을 정부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조정한다. 코로나 19로 잠시 주춤했었으나 장기적으로 통상(通商)에 그치지 않고 문화·지방행정 등 다방면으로 외국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다.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제에너지부에 ‘연구바이오산업’을 신설한다. 국비 사업 유치, 기업 투자 유치 등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 전남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업무 중요성, 산업 지형 변화를 고려할 때 같은

국 소속 신성장산업과의 연구개발팀·바이오산업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조직 규모는 15명 내외로 꾸러질 전망이다.

목표에서 2022년 개최될 제103회 전국 체전 준비를 위한 전담부서도 관광문화체육국에 설치한다.

올 10월 도립미술관 개관을 대비해 관광문화체육국에 꾸렸던 도립미술관 개관 준비단을 폐지하고, 도립미술관을 사업소로 만든다.

이러한 내용의 조직개편안은 전남도의회에 제출된 ‘전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 후 올 7월 시행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2곳 신규 지정

해남 방춘·진도 소앵무리마을

전남도는 유기농업을 이끈 ‘해남 방춘마을’과 진도 소앵무리마을 등 2개 마을을 올해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했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경지면적 20ha, 구상원 20호 이상의 규모화 된 마을 가운데 친환경인증 면적이 경지면적의 50% 이상, 유기농 인증면적이 경지면적의 20% 이상으로 구성원의 친환경 실천 의지가 강한 마을이다. 전남도는 지난 4월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평가를 거쳐 2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해남 방춘마을’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67ha로 경지면적(82ha) 대비 친환경인증 면적 비율이 82%(유기농 52%) 이상이다. 단지·규모화된 농지에 보리와 밀, 양배추, 밤호박 등 벼 이외 품목에 대해 다양하게 인증을 취득했다.

인근에 방춘서원과 흑석산 등 관광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진도 소앵무리마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74ha로 경지면적(94ha) 대비 유기농인증 면적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협동심이 강한 마을로 소문난 지역이다.

미스트롯 가수 송가인의 출신 마을로,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 등 농가소득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번엔 지정된 2개 마을에 대해 지정서를 교부하고 내년도 유기농 생태마을을 육성사업(개소당 5억원) 신청자격을 부여해 유기농업 확대·육성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체험 관련 시설·장비 등을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수목장 허가·운영 전문기업

수목장 투자

신규 수목장 투자

2,000만원부터 투자 가능

예상수익

2,000만원 투자로 월 85~105만원 수익 예상
평생 소득 구축, 30명 한정투자

수목장 44.2%

남골당 37%

산소 4%

기타 14.8%

화장 후 가장 선호하는 장례법

수목장 14%

남골당 74%

기타 12%

실제 이용하는 장례법

자료 : 보건복지부

노후 준비 +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장례준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

친환경 장묘문화(주)

전화

070-5172-3090

H·P

010-8431-5199